

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

- 일본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발생, 지진·지진해일 국내 영향분석 등 점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.6, 최대진도 6강*(일본 기상청 기준) 지진이 발생하여,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(수)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.

* 서 있기가 불가능, 무겁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며 건물의 타일과 유리창이 파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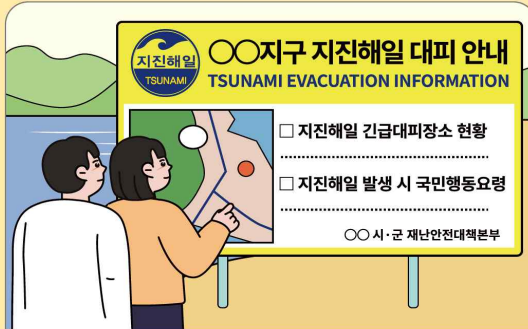
-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,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, 일본 동부·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.
-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,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.
-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,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.
- 다만,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,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.

- 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을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.
- 공공시설물 내진을 확보는 2030년까지 94% 목표('24년 80%)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,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
 -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,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.
 - 또한,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,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·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.
 - 특히,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,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,
- “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우진 (044-205-5190)
		담당자	사무관	강석도 (044-205-5191)



지진해일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내가 있는 곳이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
지역인지 미리 알아두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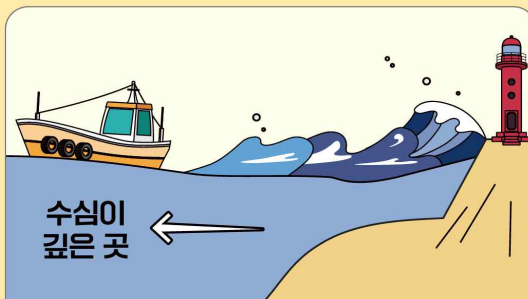
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,
해안에서 벗어나 멀리 높은 곳으로 대피



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해일
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
※ 건물 3층 이상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



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
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
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



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
시간적 여유가 있다면,
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



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
재난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